

# 1년 남은 지방선거 벌써 후끈?

단체장 비리 혐의에 '흡집' … 나주·함평·화순 입지자들 물밑 행보

## 검찰 수사·재판 진행 중 … 결과따라 요동칠 듯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최근 불법·비리 혐의 등에 잇따라 휘말리면서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장 선거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강력한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시장·군수들의 이미지에 '흡집'이 생기면서 해당 자치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 5기 들어 본인 또는 최측근이 수사기관의 표적이 된 전남지역 자치단체장은 임성훈 나주시장과 안병호 함평군수, 흥이식 화순군수 등이

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미래 일반산업 단지 조성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제3자 뇌물 수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임 시장은 재판을 통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지만,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재판 결과 여부에 따라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주지역에서는 지난 1월 특별사면된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정순남 전 전남도 경제부지사, 이광형 전 나주시 부시장 등이 물밑 행보를 펼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흥석태 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 등도 자전거전으로 거론되고 있다.

안병호 함평군수도 동합평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곧 흑스런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최근 합평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검찰수사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 군수에 도전하는 입지자들의 거센 도전이 예상된다. 합평 출신인 노루근 전 진진부군수, 이윤성 전 구례군 기획감사실장이 군수 도전을 목표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이식 화순군수는 지난 2010년 선

거를 전후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화순군은 부군수가 군수 직무 대행을 하고 있으며, 임호경 전 화순군수와 전형준 전 화순군수, 구충곤 전남도립대 총장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 또 한번 '부부군수'와 '형제군수' 집안 간 대결도 예상된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한 관계자는 "일선 시장·군수의 경우 현역 프리미엄이 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선선이 유력하지만, 흡집이 난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여부와 민심의 반응이 주목된다"며 "해당 지역에선 도전자들의 행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선거운동 상시 허용·투표 전날까지 여론조사 공표 검토

### 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착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

다. 또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선거일 당일로만 제한하는 내용도 개

정안에 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일 오후 선관위원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실무진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 의견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개정 의견서의 핵심 내용은 협행법상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4일로 정해져 있는 선거운동 기간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선거 당일을 제외하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거 180일 전부터 명함, 광고 등의 배포와 계시를 제한하는 선거법 93조도 폐지 혹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과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 한도를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하는 대신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많아 보니 규제 내용을 모른 채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허다하다"며 "이에 따라 불법선거 사례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에

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조항을 완화, 선거일 하루 전까지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선관위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동안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각종 여론조사가 대거 유포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채택되기 위해선 고비용 정치로 회귀하지 않도록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선거운동 상시 허용으로 인해 난무할 수 있는 상호 비방에 대한 제재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선관위는 앞으로 몇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 뒤 5월께 공정회를 거쳐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낼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 유진룡 문광부 장관 문화전당 현장 방문 인터뷰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문화전당은 오는 2014년 완공돼 2015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방대한 문화전당 어떻게 채울지 고민

### 연내 운영조직·인력 확보 법제화 추진"

#### 잘해야겠다는 부담 크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건립 현장을 방문했다.

유 장관은 문화전당 건립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대한 규모의 문화전당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책임감과 함께 부담을 느낀다"며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에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정부가 문화전당 건립이라는 하드웨어에 집중했다면, 이번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개관콘텐츠, 운영프로그램, 운영조직 등 콘텐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화전당의 운영체계와 관련한 법률제정 일정은

▲문화전당은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그 방법과 관련해 협조 부처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 그 암이 정해지면 법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국립기관, 법인 등 모든 형태가 검토대상이다.

-문화전당의 운영체계와 관련한 법률제정 일정은

▲문화전당은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그 방법과 관련해 협조 부처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 그 암이 정해지면 법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국립기관, 법인 등 모든 형태가 검토대상이다.

-문화전당 관련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화전당 전담 인력을 뽑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부·부처의 관례로 봤을 때 법이 만들어지고 인력을 뽑는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것이다. 법제정을 가급적 빨리 하려 한다.

유 장관은 문화전당 건립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대한 규모의 문화전당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책임감과 함께 부담을 느낀다"며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에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정부가 문화전당 건립이라는 하드웨어에 집중했다면, 이번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개관콘텐츠, 운영프로그램, 운영조직 등 콘텐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문화전당이 아시아 각국의 문화가 상호·교류·융합하는 소통의 장이자, 인종과 언어를 넘어 아시아가 하나되고 아시아 평화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기구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온라인 만평

- 김종우



강건너 불구경이랍니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정부주관 공기업 고객만족도 최우수등급 달성  
변함없는 고객의 사랑  
“매우 만족” 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전기에너지 절약 녹색성장의 시작입니다

전기는 수입되는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만드는 비싼 에너지입니다.

불필요한 전력 소비는 연료 수입을 증가시키며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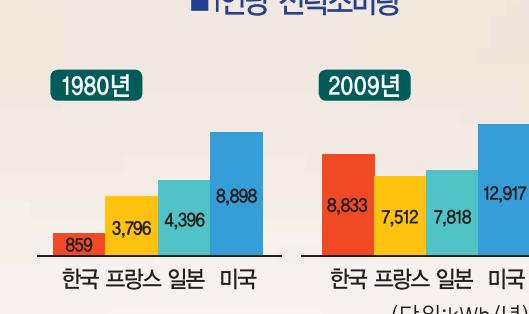
전기절약과 녹색성장,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우리나라 전기소비의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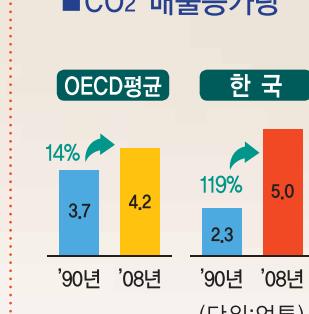
#### ■GDP대비 전력소비량(2009)



#### ■인당 전력소비량



#### ■CO2 배출증가량



한국전력

KEPCO